

「농민권리선언포럼」 제6차 회의(현장토론회) 개최결과

□ 개요

- 목적: 코로나19와 기후위기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먹거리 위기 문제를 먹거리기본권과 농민권리의 관점에서 토론 및 대안 모색
- 주제: 재난시대의 식량권(Right to Food), 그리고 농민권리
* 제11회 세계인권도시포럼(재난과 인권:새로운 사회계약) 中 식량권 세션 개최
- 일시·장소: 2021. 10. 9.(토) 10~12시, 김대중컨벤션센터(광주광역시)/영상병행
- 참석: 포럼 위원 등 50명 내외
- 주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유엔농민권리선언포럼, 공익법률센터 농본,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구분	시간	분	주요 내용	비고
개회	10:00~10:20	20	○ 개회 및 내외빈 소개 ○ 축사(영상): 정현찬(농특위원장)	사회: 김정열 대표 (농특위 농민권리선언포럼)
좌장: 윤병선 유엔농민권리선언포럼 대표				
발표	10:20~11:00	40	○ 세계위기 상황에서의 인권에 기반한 식량체계	발표: Michael Fakhri (유엔인권이사회 식량권특별보고관)
지정토론	11:00~11:50	50	○ 먹거리기본권과 농민권리 보장을 위한 한국의 운동 (농업농민정책연구소녀름 송원규 부소장) ○ 여성농민 권리의 현재와 이후 방향(농식품부 오미란 농촌여성정책팀장) ○ 농민권리의 제도화 현황과 과제(농특위 박경철 포럼위원) ○ 광주전남지역 농민의 권리현황(전여농광주전남연합 김원숙 사무처장) ○ 기후, 건강, 식량안보를 위한 먹거리 전환(기후행동비전네트워크 조길예 대표)	
	11:50~12:00	10	○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폐회	12:00		○ 종합정리 및 기념촬영	사회: 김정열 대표

□ 주요 논의내용

- 기조발제 (Michael Fakhri, 유엔인권이사회 식량권특별보고관)

지난 9월 23일 열린 세계식량정상회의를 중심으로 글로벌 거버넌스, 유엔 농민권리선언이 식량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식의 접근법, 그리고 식량권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영역적 시장(territorial market)의 개념 등 3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함

① 세계식량체계와 글로벌 거버넌스

- 세계식량정상회의(2021.9.23.)에서 ‘식량은 단순히 정책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체계와 관련되어 있다’고 정의함. 생산자, 공급자, 소비자, 중앙-지역정부, 국제기구가 협력해야 함을 인지하게 된 것이고 협력방안을 찾아내야 한다는 의미임. 식량권과 유엔농민권리선언도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식량체계(Food System)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진 것임
- 식량체계에서는 식량보다 더 중요한 것이, 코로나19에 정부와 국민이 대응하고 이로 인한 식량위기에 대응했던 것처럼, 식량체계의 혁신임

② 유엔농민권리선언의 중요성과 의미

- 양질의 식량은 양질의 일자리와 연관됨.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음식을 구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느냐 와 직결되지만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농어촌의 노동자들은 정당한 노동환경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토지는 많은 노동자들의 생존과 직결되나 접근성이 공정하지 않음. 코로나19로 토착민이나 농민의 토지 접근성이 더욱 악화됨. 이들을 돌보지 못하면 식량체계가 붕괴될 것이고 전 세계에 위협이 될 것임
- 유엔농민권리선언을 구현하는 것이 정부가 식량권의 의무를 전 국민들에게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국은 이미 법안에 식량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어 고무적임

③ 식량권과 무역

- 세계식량정상회의에서 국제무역을 다루지 않음. 자유무역은 팬데믹으로 도전받고 있으며 지금은 지역차원의 식량생산과 짧은 푸드체인을 원함. WTO의 농업관련 협약을 종식해야 함. 새로운 국제적인 식량협약이 지역의 식품체계를 지원하고 중앙-지방, 지방-지방간 협력이 필요함
- 세계식량안보위원회에서 나온 아이디어인 ‘영역적 시장’은 국경을 초월하거나 시골, 도시에 있는 시장일 수 있는데, 각 차원을 연결하며, 다양하고 포괄적이고 긍정적으로 보상하며, 순환적, 합법적이고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연대의 원칙하에 움직임
- 근본적으로 이를 제도화해야 하는데, 기존의 여러 협약들을 조정하고 영역적 시장을 활성화하고 식량권을 보장할 것인가가 문제임

○ 지정토론

①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송원규 부소장

- 2004, 2007년 식량주권 대토론회를 계기로 연대조직이 구성되진 않았으나 사회운동 진영의 토론이 활성화됨. 2010년 이후 친환경무상급식, 로컬푸드운동이 확산되며 대중적 먹거리운동이 시작됐으나 농민운동 진영에서는 식량주권을 운동의 내용으로 풀어내는 과정에 있음
- 먹거리기본권과 농민권리는 생태농업과 농민·시민 권리 중심의 접근이라는 가치를 공유함. 먹거리기본권은 지역조례, 국가먹거리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농민권리도 제도화 논의를 시작해 상호협력 모색이 필요함

②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오미란 팀장

- 생산수단 접근성 취약, 노동가치 저평가, 사회환경에서의 성차별이 여성농업인의 권리에 관한 논점의 중심이었음. 식량권 문제를 인권과 결부시켜 해결방향을 식량체계와 연계하는 것은 실천적 확장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함
- 식량체계 수립 시 먹거리기본권의 실현을 위해 여성농업인(고령, 소농)을 조직화, 교육, 시장 참여로 연계한 지역식량체계의 구축이 절실했음

③ 충남연구원 박경철 책임연구원

-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충남도가 2014년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2015~2019)」에 농민인권정책을 수록함
- 정책방향으로 우리농 가치 홍보 확대, 소외지역 농촌주민 문화이용 확대, 소외농촌지역 수용응답형 교통체계 확대 실시, 풀뿌리 마을환경 감시 강화, 농민인권 교육 및 상담 실시를 제시했으나 큰 진전은 없었음
- 2020년 3월 충남도농어민수당지원조례를 제정, 2020년부터 지급하고 있음

④ 전여농광주전남연합 김원숙 사무처장

- 광주전남지역의 농민은 2020년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축사 등 농업시설 붕괴에 대하여 현재의 법과 제도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농업을 포기하는 농민들이 많은 실정이며, 전남 각지에 농지에 태양광 설치 등 개발로 인해 소작농들이 쫓겨나고 있는 실정임

⑤ 기후행동비전네트워크 조길예 대표

- IPCC 6차 보고서(2021년), UNEP 보고서(2021년)는 메탄을 대폭 줄이는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Bioscience(2021)는 반추가축의 수가 인간과 야생 포유동물의 무게를 합한 것보다 많으며 식생활 전환을 강조함
- 육류 감축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강력한 도구임에도 채식이라는 의제가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의 메일 어젠다가 되어야 함
- 유엔 SDGs 중 Goal 2, 13을 비롯한 7개 의제가 농업먹거리와 직결됨. 건강한 먹거리가 허용된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해서는 식단을 바꿔야 함

□ 제안된 실천 의제

- 전 세계적인 먹거리위기와 기후위기 상황에서 식량을 둘러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객관적 조건이 형성된 현재 더욱 적극적으로 식량에 대한 사람들의 권리를 어떻게 확장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활동이 필요하다. 유엔농민권리선언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한 공론의 장과 여론화의 공간을 더욱 많이 마련해야 한다. 농민권리선언의 국내 정책과 제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공감과 확산의 계기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 식량을 둘러싸고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권리,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식량체계의 구축이 중요하다. 식량체계를 만들어나가는데 농민들이 참여하고 결정할 권리가 중요하다. 농민들의 권리를 포함한 먹거리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권리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향후 의제를 폭넓게 다양화하여 사회적 여론 형성과 시민사회와 정부에서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토론회 사진>

농특위원장 영상축사



토론회 장면

